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OECD 제46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회의 참석

- 2018년 10월 22일(월)~23일(화) 이틀 간 개최

2. 출장기간, 출장자 및 출장지

○ 출장기간: 2018년 10월 21일(일)~ 2018년 10월 25일(목)

○ 출장자: 추성민 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박다움 주무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지영 주임 동반 출장

○ 출장지: 프랑스 파리(OECD 본부)

3. 일정 및 수행업무

일자	수행업무
10.21.(일)	○ 이동 - 13:20 인천 출발 - 18:30(현지시간) 파리 도착
10.22.(월)	○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참석 - 09:00~09:30: 등록 - 10:00~18:00: 회의 참석 - 추성민 연구원, 박다움 주무관, 김지영 주임, 강민철 과장(주오이시디 대한민국대표부) 참석
10.23.(화)	○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참석 - 09:30~18:00: 회의 참석 - 추성민 연구원, 박다움 주무관, 김지영 주임, 강민철 과장(주오이시디 대한민국대표부) 참석
10.24.(수)	○ 오전: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관련 협의회 참석 - 추성민 연구원, 박다움 주무관, 김지영 주임 참석 ○ 오후: 이동 - 21:00(현지시간) 파리 출발
10.25.(목)	○ 이동 - 15;00 인천 도착

II. 출장 결과

1. 회원국 정책공유 라운드테이블 (의제3) : 정보공유

○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미국이 각각 자국의 농업환경정책 사례를 발표함

- (프랑스) 자국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농업관련 순환경제는 크게 지속가능한 생산, 책임감 있는 소비, 그리고 재활용 및 폐기물 감소 세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함

- (네덜란드) 현재 순환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중이며, 세부 정책은 내년에 발표될 예정임.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서 생산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식품에 대한 인식 개선, 생산방식에서의 혁신을 제시함

- (일본)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지역 순환경제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바이오매스를 관광과 연계한 '마니와市' 사례를 소개하며, 바이오매스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관련 정책의 목적이라 설명함

- (미국) 바이오우선사용 프로그램(bio-preferred program), 바이오매스품목 지원 프로그램(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 바이오연료 인프라 파트너십 지원(biofuel infrastructure partnership grants)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음

2. 식품 및 농업분야 지속가능성 개선 (의제 4)

가. 농업 및 식품시스템에서의 바이오경제와 지속가능성 (의제 4.a.) : 토론

○ 사무국은 동 연구의 목적이 회원국들의 바이오경제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농업 및 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고 설명함

- 바이오경제는 최근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연료의 범위를 넘어 개념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경제성장, 농촌개발, 고용,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사례 분석대상 회원국 중 다수는 국가전략의 내용이 짧고 상세하지 않으며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도 부족하였다고 언급함

○ 회원국은 보고서 내의 반복내용의 간결화 필요(이탈리아, 프랑스), 바이오경제 개념의 국가마다 달라 정책에 대한 국가간 비교가 어려움(노르웨이), 표준화되고 통일된 바

이오경제 정의 도출의 필요성(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자국 사례를 최신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일본, 이탈리아)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사무국은 바이오경제의 정의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어려우며, 회원국이 제시한 수정요청(서면의견 11월 9일한)을 반영한 후, 정책제언을 포함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공개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 설명함.

나. 더 나은 농업정책을 위한 디지털 기회 (의제 4.b.) : 토론

○ 사무국은 동 연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기존 농업정책 개선과 새로운 접근을 가능케 하였고 더 많은 활용기회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 개발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 회원국들은 전체적인 연구 내용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일부 개선점을 제시함

- (아르헨티나) 디지털 기술이 농촌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농촌지역 이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프랑스)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한국) 디지털 기술 활용시 큰 장애 요인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 채택 등에 필요한 비용이 크다는 점인데, 이와 관련된 비용효과적 정책 권고안 및 다른 회원국의 모범사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EU) 각 국에 요청한 설문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언급하며, 동 보고서 내용은 APM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안함. 또한 디지털 기술의 장점뿐 아니라 위험성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다뤄줄 것을 요청함

- (미국) 보고서 내용이 너무 길 경우 2권으로 나누어 발간하는 것을 제안함

○ 사무국은 농촌지역 내 청년 일자리 문제, 디지털 기술 채택 문제 등은 동 연구의 주요 목적이 아니므로 차기 PWB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보고서는 한권으로 구성하되 심화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기로 함

- 한국측 발언에 대해, 비용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각 국가마다 다른 형태의 다양한 투자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트렌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각 국가에 제공할 시사점이 달라 권고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함

- 서면의견 수렴(11월9일한) 차기 회의에서 공개여부를 논의키로 함

다. 2018 글로벌 포럼(농업과 OECD 블록체인 정책 포럼)결과 (의제 4.c.) : 정보제공

○ 사무국은 2018 OECD 블록체인 정책 포럼 참석 결과를 공유함

- 동 포럼에서 블록체인의 정의, 적용 방안, 경제적 영향 등이 논의되었으며, 농업부문 블록체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설명함

라. 농업정책의 환경영향 평가 (의제 4.d) : 공개여부

○ 사무국은 동 보고서가 OECD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s, PSE) 분류에 기초한 농업정책 분류를 사용하여 농업정책 수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함

- 4월 회의 이후에 분석대상 국가 확대,'非상품 기준에 기초한 지불' 등 새로운 정책 수단 추가, 농가수준 분석에서는 위험중립적 농가 이외에 위험회피적 농가분석 등을 추가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고 설명함

○ 동 보고서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됨

- (네덜란드) 동 연구를 통해 농업정책수단의 환경영향평가를 계량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보고서 공개에는 동의하나 지리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함

- (일본) 보고서 공개에 반대의견을 표하며, △농가단위 분석이 EU 지역에 치우 쳐 있어서 환경영향이 큰 지리적·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현 농가단위 분석의 지리적 대상을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 △생태계 서비스 등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농업정책 수단의 환경영향적 결과를 포괄하지 못함 △정책 평가분석에 총합된(aggregate)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제한된 연구 결과가 도출됨 △특정 농업지원정책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환경영향을 준다는 식의 확정적 결론 도출은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언급함

- (한국) 일본 의견에 동의하며, 농가단위분석 시 EU 국가의 사례가 다른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며, 지리적· 환경적 영향 등 요건이 회원국별 상이함에 따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 창출을 위해 EU 국가 이외 다른 국가사례 분석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함

- (프랑스) 회원국의 의견반영 후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바이오경제 모델에

대한 고려 추가, △다른 지역의 분석내용 필요, △재해보험 보조금의 환경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문헌 비교 등을 보완할 것을 요청함

- (이탈리아) 보고서 공개 동의하나, 농업 환경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s, PSE) 개념을 적용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 (호주) 그간 심층적 논의를 통해, PSE를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바 있다고 상기함. 또한,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은 시장가격지지가 생산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투입재 사용과 연결되므로 당연한 결론이며, 보고서 공개를 지지한다고 언급함

- (미국) 단정적인 결과 도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 영향에 대한 농업 특정 정책 수단에 대해'부정'또는'긍정'이분법적 결과를 제시하는 것보다 시사점 및 교훈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서면절차로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제안함

- (뉴질랜드) 시장가격지지 정책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론은 OECD 선행연구들의 결론과 일치하며, 이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우려를 제기했으나, 동 문서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핀란드) 보고서의 당초목적이 계량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정책수단을 확인하는 것임에 따라, 당초 연구 목적을 소기 달성했다고 생각하므로, 공개에 동의함

○ 사무국은 사례분석 참여국 확보가 어려웠던 점 등 연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언급함. 다만, 연구에 활용한 분석모형의 한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동 연구결과가 정책수단 선택에 미칠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 요약본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며, 사례조사국 확대 등 기타 회원국이 제기한 보완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PWB하의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보고서 요약본(executive summary)에서 너무 단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언급하며 수정할 것을 요청한 일본측 의견에 대해, 추후 일본측이 제시한 문구수정안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타협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 일본측은 사무국의 제안을 수락하며, 조만간 수정안을 제시하여 사무국측과 협의한 후 공개여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 답변함

○ 이후, 서면 절차(서면의견 11월9일한)를 통해 보고서 공개여부를 진행하는 것으로 언급함

마.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에 관한 심화연구 (의제 4.e) : 토론

○ 사무국은 동 연구의 목적이 선행연구 문헌검토를 통해 농업정책이 생산성과 환경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관련 정책 제언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회원국들은 방대한 양의 선행연구를 정리한 사무국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으나, 분석 대상 국가가 유럽에 치우쳐있다는 점 등에 우려를 표함

- 한국은 동 보고서에 미국, EU 외의 국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설명과 시사점을 추가할 것을 요청함

- 회원국들은 대상국가가 EU 국가에 치우쳐 다른 국가에 적용이 의문(한국, 칠레, 일본), 선행연구 대상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프랑스, 미국),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나 소비자 기호 등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호주)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사무국은 각 회원국에서 관련된 선행연구 내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선행연구 선정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서면의견 수렴(11월9일) 후 차기회의에서 공개여부를 논의할 예정임

바. 식품 및 농업분야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의제 4.f) : 정보공유

○ 사무국은 각국의 농업 혁신보고서 작성 현황과 경제 분석업무에 대한 지원 내용을 설명함

- 한국의 혁신보고서는 2018년 12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고, 일본의 혁신보고서는 현재 원고를 작성중이며 내년 3월 회의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내년 5월 농업정책시장작업반회의에서 지금까지 작성한 혁신보고서에 대한 종합 분석과 정책 제언을 검토할 예정임

- 또한, 사무국은 관련활동으로서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 지원, 다양한 관점에서의 조세분야 연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제고방안, 식품사슬 등의 연구도 진행 중임을 부연함

사. 농업환경지표 : 양분수지 (의제 4.g) : 공개여부

○ 사무국은 동 연구는 회원국 OECD 양분수지 데이터와 국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양분수지 변화추이 및 경향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라 설명하며, 지난 회의 이후 회원국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언급함.

○ 회원국은 대체로 보고서 공개를 지지(네덜란드, EU)하였으나, 보고서에 활용된 데이터의 업데이트 등 수정(이탈리아, 캐나다), 지난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의견의 반영여부 확인(프랑스) 등을 사무국에 요청함

○ 사무국은 회원국의 요청사항 반영여부에 대한 회신부족 등을 사과하며,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아. 농업환경지표 : 농지에서의 토지이용, 농약, 생물다양성 (의제 4.h) : 토론

○ 사무국은 동 연구는 토지이용, 농약,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OECD농업환경지표의 최신 분석내용이며, 지표관련 주요 경향, 국별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함.

- 분석 결과,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농업정책들은 농지 내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함

○ 회원국들은 농지 내 조류 지표의 대표성, 분석 과정 설명의 필요성, 자료 제공의 부담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농지 내 조류가 생물다양성을 대리(proxy)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임(네덜란드, 스웨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추가 제시 필요(네덜란드), 농약의 경우 사용량보다 독성을 기준으로 한 지표설정이 필요(이탈리아, 핀란드), 사무국의 자료 요청에 부담을 느끼며, 그에 비해 동 연구의 작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미국), 분석에 사용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청(프랑스)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사무국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그밖의 농약 사용의 독성 수준 등은 자료부족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함

- 서면의견 수렴(11월9일한) 후 차기 회의에서 공개여부를 논의하기로 함

자. OECD-LUKE 워크숍 결과(효과적 정책 모니터링, 평가, 디자인을 위한 농업환경지표에의 신기술 활용) (의제 4.i) : 정보제공

○ 사무국은 지난 5월 29~6.1일간 헬싱키에서 OECD와 LUKE(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Natural Resources Institute Finland)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던 워크숍 결과를 발표함.

- 23개국에서 87명의 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업환경지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모색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새

로운 기술을 채택한 국가사례 등을 공유했음

차. 농업환경지표 개선 및 업데이트(의제 4.j) : 토론

○ 사무국은 동 연구의 목적은 각국의 농업활동 및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압력을 파악, 주요지표 및 정책의 경향과 추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국별 대시보드(dashboard)는 그래프로 표현된 주요 환경지표와, 이들 지표를 종합하여 지수화한(composite index) 농업환경발전지수(EPAI, Environmental Progress in Agriculture index)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과 비교하여 환경적 진전과 생산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 설명함

- 사무국은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농경지 생물다양성 서식지 지표 및 농업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기상사건(weather event)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며, 비용효과적 농업환경정책(AEP, Agri-environmental policy)조사 작업의 시범작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관심있는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함

○ 다수의 회원국들이 대시보드상의 종합지수와 농업환경정책조사 작업 전반에 대한 우려를 표현함

- (네덜란드) 농업환경발전지수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함. 네덜란드의 경우, 북부와 남부 지역간 농업체계 차이로 농법이 달라 환경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성이 지수라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듦

- (프랑스) 위성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 지표나 기상사건 지표를 작성하는 것을 환영하며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이와 더불어 농업분야 온실가스 효과를 적절하게 확인하도록 질산모니터링 지표를 신규로 추가할 것을 제안함

- (한국) 현재의 농업환경발전지수는 직관성이 떨어지며, 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더라도 국가간 차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며, 농업환경정책조사의 경우 농업정책과 환경영향간 복잡성을 고려하여 더 신중히 접근되어야 함을 언급함

-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한국이 언급했듯이 농업환경발전지수는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함. 또한 지수의 구성요소에 같은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며, 종합지수에서 비교대상을 총요소생산성이 아닌 농업생산량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함

- (아르헨티나) 종합지수가 불명확하고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의문을 제시하였으며, 농업환경정책조사 설문지를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었음을 언급함. 예를 들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농업정책을 명시해야하는지, 환경요소가 포함된 농업정책(농업화학제품에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을 명시해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음. 지표와 관련, 유전자변형농산물과 바이오연료 작물이 농업관행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사무국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지 의문이라고 언급함

- (캐나다) 각 지표가 의미하는 숨은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농업환경발전지수 해석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중들이 이를 이해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농업환경발전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들 중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농업환경정책조사 작업에 대해서는 범위는 무엇이며, 어떤 결론을 낼지 방법론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함. 또한, 회원국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부연함

- (미국) 농업환경발전지수가 다른 지표를 요약하여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요인들이 하나의 숫자로 요약되어 제시된다면, 정책해석에 오해(misleading)를 유발할 수있다고 언급함. 또한, 지수해석이 어렵고(0에 가까울수록 지표들이 변화가 없다는 것인지, 모든 지표가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인지 모르겠음) 따라서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함. 농업환경정책조사와 관련, 회원국들이 의미있게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 객관식 질문지로 비용효과적 정책인지를 판단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함. 따라서 미국은 농업환경정책 조사 자체에 대한 목적과 동 작업이 가치가 있는 과정인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한다고 지적함

- (호주) 농업환경정책조사 작업의 경우,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데이터 및 정보 제공에 회원국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노력에 비해 동 연구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언급함. 또한, 조사 결과를 OECD 타 보고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회원국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아르헨티나처럼 유전자변형작물을 어떻게 지표화할지에 대해서도 사무국측의 설명을 요구함

○ 사무국은 많은 회원국들이 제기한 대시보드와 농업환경정책조사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 사무국측이 당초 의도했던 내용과 회원국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작업 진행계획을 밝힘

(대시보드, 종합지수 관련 답변)

- 농업환경발전지수의 경우, 지표들의 증감 경향을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며, 숫자보다는 증감경향성에 초점을 둔 것임. 이미 M&E 보고서나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에서 여러 환경지표들의 경향을 총요소생산성 경향과 함께 그래프로 제시해오고 있는데, 환경지표를 하나의 종합지수로 요약한다면 총요소생산성과 비교가용이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용한 것임

- 그러나 종합지수의 유용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대시보드의 구성요소 변경, 그래프 수정 등을 통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 종합지수에 대해서, 다양한 지표를 어떻게 요약할지에 고민하여 선택한 방법이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지수는 포기하고 환경영향의 경향을 나타내는데 집중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함

- 국가 내 농업구조를 반영하는 문제는 생산 관련 지표(작물생산량, 토지이용)를 추가함으로써 해결가능하다 생각한다고 언급함

- 질산 관련 지표는 작물별 비료사용량, 작물별 흡수량 등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는 작물별로 특정적인 사항으로 국별조사가 어려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함

(농업환경정책조사 작업 관련 답변)

- 농업환경정책조사 작업에 대해, 각 나라별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경우는 많으나, 실제로 어떤 정책 수단이나 도구가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바, 동 작업을 통해 이를 규명하여 회원국 정책 기획 및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당초 의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함

- 다만, 동 작업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PSE, 디지털 관련 설문조사결과 등 기존 OECD에서 보유한 국별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것임

(향후 작업계획 관련 답변)

- 향후 작업계획과 관련, 사무국은 대시보드를 개선하여 종합지수 표기없이 간략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함

- 농업환경정책 조사에 대해 사무국은 소규모 그룹(약 6개국)을 구성하여 동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고민한 후 다른 회원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시범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소규모 그룹 참여 희망 의향을 물음

- 회원국은 사무국이 제안한 소규모 그룹 구성에 동의(호주,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포르투갈)하였으며, 미국은 참여를 희망하나 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3. 물 개혁정책 (의제 5)

가. 농업분야 물 정책 개혁 방향 모색(의제 5.a) : 토론

○ 사무국은 동 연구가 정책 설계가 아닌 정책수행과정에 초점을 두었다고 언급하며, 물

정책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5가지 조건이 정책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가능한 방안으로서 △농업용수 이용 부과 △ 부정적 보조금 폐지 △지하수 집중사용 규제 △비점오염원 해결을 언급함

○ 회원국들은 보고서 공개와 관련, 보고서가 회원국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보고서의 주요 장점 및 한계점의 명시(EU), 기존 OECD에서 발간한 농업환경분야의 물정책 관련 보고서에 대한 문헌 검토 필요(프랑스) 등을 보완한 후에 공개할 것을 요청함

* 보고서 내용 중 우리나라 환경부와 농식품부 담당자간 상호정책 인지차이를 설명한 문장에 대해서는 사무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삭제하기로 결정

○ 사무국은 프랑스가 언급한 OECD에서 기 수행된 농업환경의 물 관련 연구과의 상호 연계성을 살펴볼 계획이며, 물은 에너지, 토양 등과 연계된 점을 고려하여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 연구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 보고서는 서면의견 수렴(11월 9일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정함

나. 세계은행-OECD 워크숍(농업분야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정책 변화 촉진)(의제 5.b) : 정보공유

○ 사무국은 OECD와 세계은행 공동으로 '농업분야 지속가능한 물 사용을 위한 정책 변화 촉진'에 관한 워크숍이 개최된바 있다 보고함 ('18.5.29-30, 워싱턴 미국)

4.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농업기여의 잠재성의 경제적 결과 (의제 6)

○ 사무국은 농업분야의 경쟁력 및 식량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한 4개의 연구(6.a~6.d)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종합분석한 보고서(6.e)를 준비 중이라 설명함.

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경제적 평가(의제 6.a) : 공개여부

○ 사무국은 동 연구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별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함

○ 회원국은 내용이 지나치게 분석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정책입안자에게 주는 시사점이 낮음(EU), 분석 모형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 필요(이탈리아), 탄소세 부과 방식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 추가(프랑스), 실질적인 세금제도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할 필요(캐나다,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사무국은 실용적인 세금 부과 이행법(practical implementation)에 대한 참조문헌 검토 등을 포함한 회원국 의견을 수렴(11월9일한)하여, 서면절차를 거쳐 보고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나.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비용효과성 (의제 6.b.) : 공개여부

○ 사무국은 동 보고서는 유럽 농가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비용효과성을 측정한 연구라고 설명함

○ 회원국들은 동 연구의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며, 분석 대상국가와 분석방법 관련 의견을 제시함

- 분석 대상국가가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임을 명확히 밝혀 유럽과 다른 농업환경을 가진 국가에 적용에 유의(호주, 오스트리아, EU), 가축식습관 차이에 따른 감축결과 비교가 모형에 반영될 필요(프랑스),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낙농업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대한 우려(미국, EU)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사무국은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기는 하나, 다른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상세설명은 추가할 것임을 언급함.

- 11월 9일까지 의견수렴 후, 서면절차를 거쳐 보고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다.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옵션(의제 6.c.) : 토론

○ 사무국은 동 보고서의 목적이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효과성 확인, 기후변화 완화정책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함.

○ 회원국들은 모형의 가정, 정책적 시사점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격리(carbon sequestration)를 분석 대상에 포함(프랑스), 분석에 사용된 가설 및 활용 모형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제기(EU, 호주),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의 부족(네덜란드, 프랑스) 등을 의견으로 제시함.

○ 사무국은 회원국 서면의견을 요청(11월9일한)하였으며, 동 연구가 정치경제학적 분석보다는 현상 자체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가정 및 지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라. 운송 부문의 바이오연료와 기후변화 감축(의제 6.d.) : 토론

○ 사무국은 운송 부문에서 바이오연료를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완화에의 기여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달성여부 분석, 연구의 한계점 등을 도출하였다고 설명함.

○ 캐나다는 동 연구 가설의 근거가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지구기온상승 시나리오임을 근거로 IEA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무국은 협력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변함

- 11월 9일까지 의견수렴 후, 서면절차를 거쳐 보고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며, 수정보고서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 다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함

마. 기후변화 완화정책 분석(의제 6.e.) : 토론

○ 사무국은 여러가지 농업환경정책이 기후변화 완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효율성을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준비중이라고 설명함

○ 회원국은 동 보고서의 정책적 시사점, 제언에 대한 관심을 표하였으나, 보고서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초안을 마련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함

- 기후변화 완화 관련 OECD내 다른 연구 및 기존 연구보고서와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의문(네덜란드, 스웨덴, 아르헨티나), 실질적 정책시행의 용이성 분석을 위한 정책간 비교설명 추가 필요(호주), 동 보고서에서 다룰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질의(EU), 신속한 보고서 초안 마련 필요(EU, 캐나다)

○ 사무국은 서면의견을 수렴(11월 9일한) 2018년 말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회람할 계획이며, 이후 보고서 개요 등에 대한 개선안을 반영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5. 토지이용, 기후변화 완화, 생태계, 식량 : 토지이용 부문에서의 정책 조정 (의제 7) : 토론

○ 사무국은 동 연구는 토지이용분야 상호연계(nexus)된 다양한 정책 조율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와 생태계 보존,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함

○ 회원국은 국가 중장기 토지이용 계획 수립시 동 보고서가 도움이 될 것(아일랜드), 농업과 식품 분야가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함(EU), 상호연계 정책에 '무역'을 추가해야 함(캐나다, 스웨덴)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사무국은 동 보고서가 초안 단계로서 향후 회원국 의견을 반영한 우수사례 도출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임을 언급함

- 기후, 투자, 개발 작업반(WPCID, 10월25일~26일)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서면의견 제출기한은 11월 2일까지로 설명함

6. 환경정책위원회(EPOC) 활동보고 (의제 10) : 정보공유

○ 사무국은 농업환경공동작업반과 관련된 환경정책위원회 활동을 보고함.

- OECD 회원국의 농약(pesticide) 및 비료 사용 경향과 정책 개요 및 함의 검토에 관한 보고서, 생물다양성 정책 수단의 효과성 평가,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환경글로벌 포럼 개최, 정수처리중 미량오염물질(CEC) 위험 최소화를 위한 비용효과적 정책 모색, 물 투자 관련 공동 프로젝트 추진, 질소 순환 오염 대응 권고안 마련 등

7. 농업총생산성 및 환경에 관한 네트워크 (의제 9) : 정보공유

○ 사무국은 동 네트워크의 활동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함

- 동 네트워크는 회원국의 총요소생산성(TFP) 및 환경적으로 조정된 총요소생산성(EATFP) 비교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경험과 모범사례 공유하기 위해 2017년 구성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방법론 개선, 모범사례 연구,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2019년 공식 회의는 JWPAE와 연계하여 2회 개최('19.4.4~5, 10.30~31)될 예정이며, 회원국의 데이터 및 농업경제 전문가가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함

8. 농업환경공동작업반 의장단 선출 (의제 10) : 정보공유

○ 내년도 의장단 구성안에 대해 회원국들은 이견없이 합의하며, 의장국은 프랑스(재임), 부의장국은 한국, 네덜란드, 일본, 아일랜드가 선출됨

- 우리나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영아 부연구위원이 신임 부의장으로 선임됨

9. 차기회의 일정 등 (의제 11)

○ 사무국은 차기 회의(제47차)는 '19년 4월1일~2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논의 의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국가정책 및 사례 라운드테이블(의제3) 관련, 3~4개 국가에서 발표할 예정임

- 2건의 의제* 관련 소규모 그룹 구성을 통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 및 제안 기대

  * 농업총요소생산성 및 환경에 관한 네트워크 보고서, 농업정책의 환경영향 평가